

‘광주시 패싱’에 시의회 단단히 뿔났다

코로나 민생대책·시도통합 제안 ‘일방통행’에 불만고조
“법적으로 문제 없다지만 서로 논의는 해야하지 않겠냐”

광주시의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최근 광주시가 시·도통합론과 민생안정대책 등을 내놓으면 시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어 일방적으로 진행, ‘패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9차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원 규모와 대상 결정 과정에서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배제한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전체 민생안정지원금 2003억원 중 추경을 통해 의회에서 승인한 300여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1차 지원 때 사전 협의없이 지원금을 책정했다는 의회 지적을 받고 1000억원 가까이 대규모 지원이 있었던 2차 때는 의회와 협의를 했다.

하지만, 이후 3~9차까지 의회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의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A의원은 “1차 민생안정대책 이후 사전 협의가 없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2차때 협의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패싱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B의원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민생안정대책을 신문에 봐야 하느냐”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서로 논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전남 통합론과 관련해서도 시의회는 사전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며칠 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사전 협의가 없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양금은 가지지 않고 있다. C의원은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일을 제안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면서 “통합에 동의는 동의하지만, 사전 협의가 없다보니 속으로 끔찍한 의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 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의원들의 불만이 이해가 간다”면서 “앞으로는 사전 논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31년만에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남구 백운고가차도가 23일 오전 마지막 상판이 해체돼 도로를 지탱했던 기둥만 남아있는 가운데 광주도심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다.

광주 백운고가 마지막 상판 철거...31년만에 도로기능 상실

해체작업 11월께 완료...백운광장~주월교차로 왕복 11차로까지 확장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백운고가차도의 마지막 상판이 해체되면서 도로의 기능이 31년만에 완전히 상실됐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23일 백운고가차도 상부 마지막 구조물을 이날 오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백운고가차도는 도로를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만 남아있으며 장비 등을 동원해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옹벽 등 잔재물 해체작업에 돌입하며 11월께 철거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철거가 완료된 뒤에는 백운광장에서 주월교

차로 구간이 왕복 11차로까지 확장돼 교통혼잡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89년 11월 길이 385.8m, 폭 15.5m로 개통된 백운고가차도는 백운동부터 주월동까지 도심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건설 당시 경전선 철도로 인해 급경사와 급커브로 시공돼 잦은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해 광주의 대표 위험도로로 불렸

다. 도심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변상권 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예산 절감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남구청사 앞 대남대로 선형개량사업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를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6월4일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했다.

김미희기자

2022년 개교 한전공대 명칭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가닥 내달 5일 법인 이사회 보고 후 의결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과대학의 공식 명칭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잠정 결정됐다. 23일 한전공대설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현재 잠정 확정된 교명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신청을 마쳤다. 앞서 한전은 올해 초부터 내부 평가와 외부 국민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가집단 컨설팅과 브랜드 네이밍 과정을 거쳐 명칭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사실상 잠정 확정했다.

교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에너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업 명칭인 ‘한전’ 대신 국가명 ‘한국’을 넣고 정체성을 감안해 ‘에너지’를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설립추진위는 오는 10월5일 열리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교명 잠정 확정안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대학 명칭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공식적인 교명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잠정 확정된 교명은 교육부 대학설립 설립 인가 단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은 지난 7월 설계업체 선정 이후 현재 1단계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한전은 내년 1~2월께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사 선정을 거쳐 5월께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에 맞춰 ‘2만㎡ 이상’의 필수 면적을 갖춘 ‘교사(캠퍼스)’ 확보를 위해 나주혁신산업단지 내 1만7000㎡ 규모의 한전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일정 기간 동안만 임대교사로 활용하고 나주혁신도시 본교지에는 우선 4000㎡ 규모의 캠퍼스를 먼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후속 건축물은 개교 이후 순차적으로 완공해 나갈 예정이다. 한전 본사 소재지인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전공대는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에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등 총 1000명을 기준으로 설립된다. 대학과 연계한 대형 연구시설 부지 40만㎡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40만㎡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조성한다.

김민정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귍니다.
 사람의 발길이 찾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